



# EAI 여론브리핑 제29호

WPO • EAI • 경향신문 공동  
UN인권선언 채택 60주년 기념 “국제인권의식여론조사”  
WORLDPUBLICOPINION.ORG

## 제6차 국제여론으로 본 민주주의의 위기 “민주적 가치의 확산과 거버넌스의 위기”

대표집필 :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 [참여국가 : 19개국]

- 유럽 러시아 영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프랑스
- 아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 북남미 미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 중동 아제르바이잔 요르단 이란 터키 팔레스타인 이집트
-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 이번 조사에서는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19개국 17,525명 응답자의 데이터 분석결과를 소개한다.  
※ 조사일시 : 2008년 1월~4월/ 한국조사 “한국리서치”

### [발표 주제]

1. 민주주의 위기 도래하나? (1) 기대와 현실의 갭 확대 (2) 신뢰받는 민주정부가 없다
2. 신뢰의 위기 원인 : (1) 대표성의 위기 (2) 반응성의 위기 (3) 효율성의 위기
3.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 정치적 신뢰기반의 복구, 조사국 중 정부신뢰도 꼴찌

### [발표계획]

차수	한국발표	주제	비고
1차	3월 8일	인권1. 여성권과 양성평등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2차	3월 20일	인권2. 중국의 티베트 정책	6개국 조사
3차	3월 22일	인권3. 인종차별	3월 21일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
4차	4월 21일	현안1. 오일쇼크의 위협	국제유가 폭등
5차	5월 2	인권4. 언론의 자유	5월 3일 세계 언론자유 의 날
6차	5월 13일	현안2. 민주주의의 위기	민주주의/ 여론/ 거버넌스 인식 비교
7차	5월 셋째 주	현안3. 세계지도자 평가	글로벌/지역 지도자 신뢰도 평가
8차	6월	인권4. 낙태/이혼녀 문제	6월 23일 국제 미망인의 날
9차	6월	인권5. 정부의 고문 인식	6월 26일 세계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



## 프로젝트 개요

“미국 매릴랜드 대학의 국제여론조사 연구기관인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이 운영하는 월드퍼블릭오피니언(<http://www.WorldPublicOpinion.org>) 프로그램은 유엔고등인권판무관 (UNHCHR)의 협조 아래 유엔인권선언 채택 6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인권의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제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 이숙종 성대 행정학과 교수, <http://www.eai.or.kr>)과 경향신문(<http://www.kyunghyang.com>)은 한국 측 조사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번조사는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인권 문제 관련 국제여론조사로서 인권 및 여러 국제현안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다른 나라 국민들과 비교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UNHCHR(유엔고등인권판무관)의 요청에 따라 주요결과는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정한 인권 관련기념일들에 즈음하여 주제별(양성평등/인종차별/언론의 자유/고문/낙태/정치적 민주주의 성숙도)로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권관련 주제 외에도 국제현안(석유에너지 자원/ 세계 및 지역별 지도자 리더십 평가/ 각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론의 역할/중동평화와 유엔의 역할/새로운 핵 폐기 국제규약 창설에 대한 입장/ 중국과 티벳)에 대한 국제여론도 소개한다.

2008년 3월 7일

경향신문

EAI 여론분석센터 국제인권 의식조사 연구팀

## 한국조사 개요

- 전체기획 : 월드퍼블릭오피니언(WorldPublicOpinion.org Network)
- 한국기획 : 동아시아연구원(EAI) • 경향신문
- 실 사 : 한국리서치
- 조사일시 : 2008년 2월 10일~11일
- 조사대상 :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2006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제주 제외)
- 표 본 : 600명
- 표본추출 : 층화 무작위 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
- 표집오차 : 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 표집오차 ± 4.0%
- 조사방법 : 전화면접조사
- 가 중 치 : 지역(권) • 성별 • 세대 가중치 부여
- 연 구 팀
  - 연구팀장 :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 연 구 팀 : 이숙종(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 서상민(EAI 연구기획국장)
  - 이근수(EAI 거버넌스센터 부소장) •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 간 사 : 곽소희(EAI 연구원)
- 연구지원 : Lisa Collins(EAI 인턴) • Matt Lauer(EAI 인턴)

관련문의 :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02-2277-1683(내선102)



## I. 민주주의의 위기 도래 하는가?

### 1. 민주주의의 아이러니, 민주적 가치의 확산과 민주정부 신뢰위기

#### □ 민주적 가치의 확산은 시대적 추세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심각한 정치적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 이숙중 성균관대)과 경향신문이 세계여론조사기구인 WPO(월드퍼블릭오피니언)와 함께 2008년 1~3월 간 19개 주요국가에서 실시한 국제인권여론조사 결과이다. 이 조사에는 5대륙 19개 국에서 17,525명이 참여하였다.

#### “정부권위, 민의에 기초해야” 85%

정부권위의 정통성을 민의에서 찾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세계인의 85%가 동의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전통적인 1세대 민주국가들은 물론 냉전해체이후 독립과 민주화의 길로 접어든 동구 국가(폴란드, 우크라이나 등)들에서도 국민들의 의사로부터 정부의 정통성을 찾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었다. 특히 아직 비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잔존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도 각각 82%, 76%가 정부의 권위는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치관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이는 이들 국가의 정치적 변동을 전망할 때 주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림1].

#### 보통선거제도(universal suffrage) 지지 84%, 중국인 83%, “보통선거로 지도자 선출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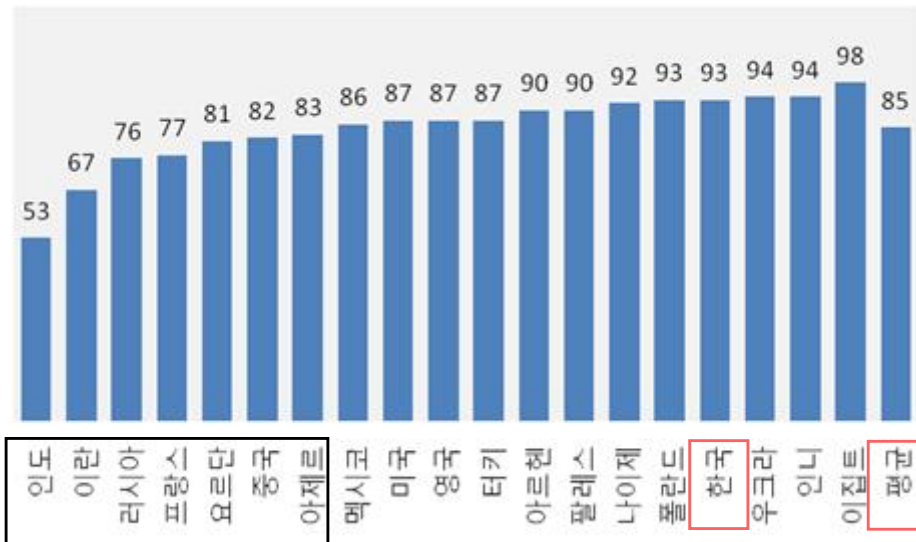
민주주의의 제도적 근간이 되는 보통선거제도(universal suffrage)에 대해서도 세계인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84%가 전체 국민에게 투표기회를 주는 보통선거권의 정당성을 주장한 반면 12%가 보통선거가 아닌 제3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경제개방과 자유화가 정치자유화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국에서 응답자의 83%가 정부 지도자를 보통선거방식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경분리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공산당과 당국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그림2].

#### 인도 및 일부 회교국가, 민주적 가치와 제도에 대해 부정적 인식 상대적으로 많아

지역이나 체제를 넘어 전 세계적 차원에서 민주적 가치와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 및 이란, 요르단 같은 일부 회교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회교 국가들에서도 헌법과 선거절차를 통해 정부를 구성하고 통치의 정당성을 부분적으로 확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종교적 교리와 권위주의적 제도에 근거하여 통치의 정당성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인도의 경우 민주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민주적 가치와 제도에 대한 확신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인다. 가깝게는 2004년 인도 지방의회 선거만 보더라도 폭력사태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정치적으로 여전히 불안정한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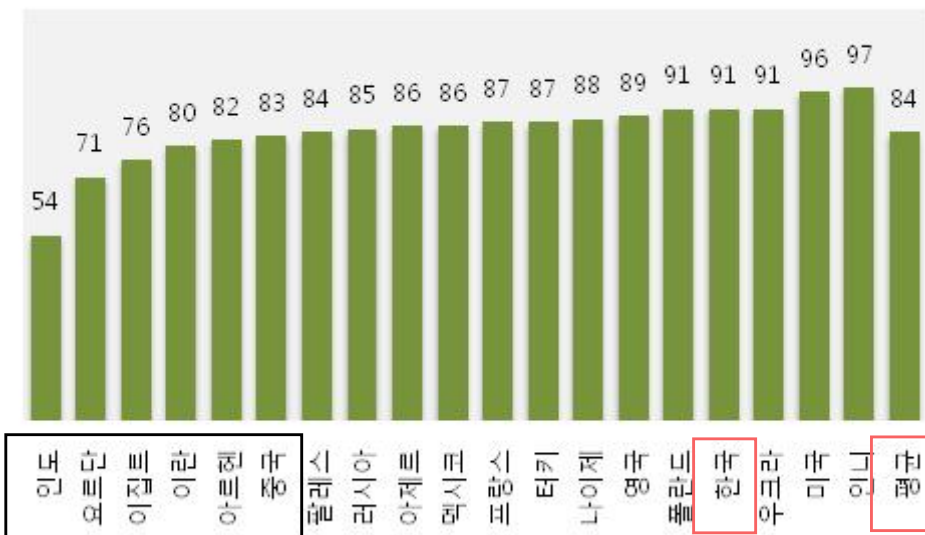


[그림1] 민주적 정통성에 대한 동의(%)



주1. 매우 동의, 약간 동의, 약간 반대, 매우 반대 중 앞의 두 응답비율을 합산  
주2. 질문은 민의의 기초하여 정부권위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이다.

[그림2] 보통선거제(universal suffrage)에 대한 동의(%)



주1. '정부지도자들이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투표를 하는 선거(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전자의 답변 비율



## 2. 민주주의의 아이러니, 민주적 가치 확산 속에 민주정부 신뢰위기가 공존

### 민주정부가 신뢰위기 더 심각

- 비(非)서구민주국가에서 정부신뢰 더 높아  
: 중국 83%, 러시아 64%, 팔레스타인 55%, 요르단 54%
- 서구민주국가/남미 정부 불신 높아  
: 미국 40%, 프랑스 37%, 영국 31%, 아르헨티나 23%, 멕시코 22%
- 한국 국민 “정부 신뢰 한다” 18% 불과, 조사 19개국 중 가장 낮아

정부 신뢰하는가? 44% 긍정, 54% 부정

이번 조사를 실시한 19개국 19,525명 중 44%만이 자기나라 정부가 얼마나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항상 그렇다(12%)’ 혹은 ‘대부분 그렇다(32%)’라고 긍정했다. 그러나 54%는 ‘아주 가끔(74%)’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6%)’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선택했다. 세계적으로 정치적 불신이 심각한 수준임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권위주의 체제 유지하는 국가 권위주의 잔재가 남아 있는 전환기 국가, 정부신뢰 높아  
특히 중국처럼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거나 주요 회교공화국처럼 전통적인 자유민주주의체제와는 거리가 있는 국가, 특히 정치적 자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동구 및 구 소연방 소속 국가들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다. 중국 응답자의 83%, 러시아 국민의 64%가 자기나라 정부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스라엘과의 분쟁, 이라크 전쟁의 여파로 내홍을 겪고 있는 요르단 등에서 자기 정부에 대한 신뢰가 과반수를 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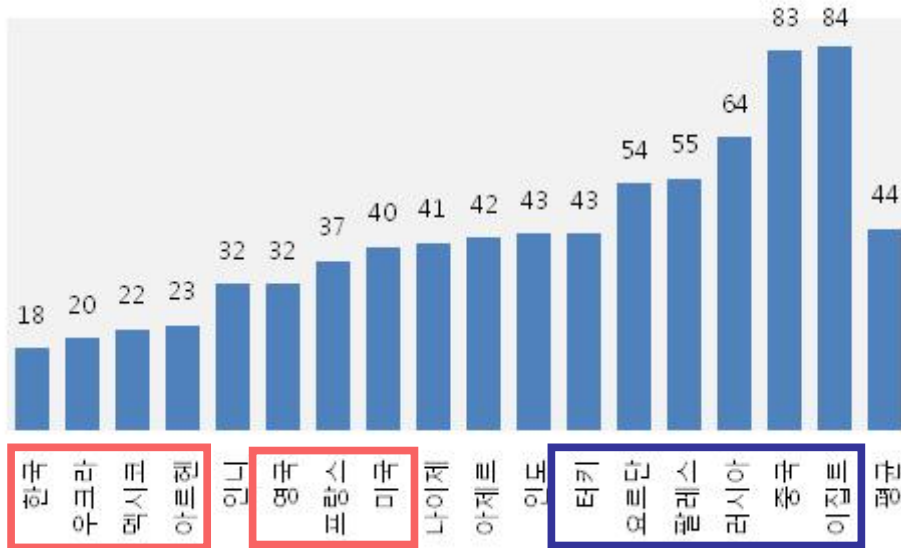
서구 전통적인 민주국가, 1980년대 민주적 전환기를 거친 남미/한국 등에서 정부불신 심해  
반면 세계적 차원에서 확인되는 민주적 가치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에 대한 냉담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서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대표하는 미국, 프랑스, 영국에서 자기나라 정부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각각 40%, 37%, 31%로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또한 한국이나 남미의 국가들처럼 1970-80년대 제3의 민주화 물결시기에 민주적 전환기를 한국이나 남미 나라들에서 국민들의 정부불신이 특히 심각하다. 남미의 아르헨티나, 멕시코 국민 중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신뢰를 보인 응답은 각각 23%, 22%에 불과했고 한국은 조사국 중 가장 적은 18%에 불과했다.

민주정부에 대한 불신이 권위주의적 체제로의 회귀의식으로 이어지지는 않아

조사결과만 보면 과거 권위주의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로 대체되는 세계사적 과정에서 입증되었다고 믿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다시말해 이러한 정치 불신이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낳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하는 정부들에 대한 불신이 비민주적 요소를 갖고 있는 정부들에 대한 불신을 능가한다고 해서 이러한 불신이 바로 권위주의 체제로의 복귀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적 가치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이 아이러니하지만, 사람들 속에 내면화되어 가는 민주주의의 가치는 권위주의로의 회귀경향을 억제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3] 정부신뢰 비율(%)



주1. '정부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때가 얼마나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1. 거의 항상, 2. 대부분 그렇다, 3. 가끔 그렇다, 4. 전혀 그런적 없다 중 1과 2번을 답한 응답자 비율.

## II. 정치적 신뢰의 위기를 가져오는 요인

### 정치 불신을 야기시키는 요인들

-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의 위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소수 거대 이익집단만을 대변" 63%, "전체 국민을 대변" 30%
- **반응성(responsiveness)의 위기 "국민을 무시마라"**  
민의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갭" 크다
- **효율성(effectiveness)의 위기 "실력을 보여라"**  
경제실적 부진으로 대표되는 민주주의의 효율성에 대한 불신

민주국가의 정부가 신뢰의 위기에 직면하게 만든 원인은 무엇이고 그 폐해는 무엇이 문제인가?

#### ◎ 대표성의 위기(representativeness)가 정부 불신의 주요인

첫째, 정부의 민주적 대표성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정부의 정치적 정통성이 크게 훼손된다. 민주주의제도의 활력은 정부와 정치권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계층과 집단의 입장과 이익을 폭넓게 대변하여 조화롭게 실현시켜 나갈 때 실현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정책집행과정에서의 거래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되고 정부의 통치기능은 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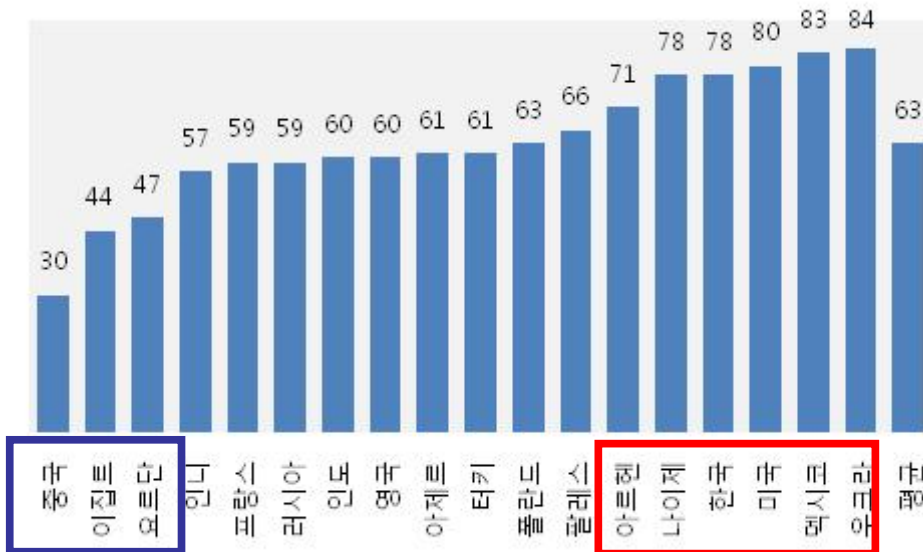


약화된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3%가 정부는 소수의 거대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본 반면, 전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보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특히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았던 멕시코(83%), 미국(80%), 한국(78%), 아르헨티나(71%) 등에서 정부가 특수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한다는 불신이 높았다. 반면 자기나라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여주었던 중국, 이집트, 요르단, 러시아 등에서는 정부가 거대이익집단을 대변한다는 불신은 상대적으로 낮다[그림1].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부라 하더라도 정부가 특수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많은 국민들이 느낄 경우 이들은 정부의 모든 행위에 의혹의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들의 정치적 소외감을 자극할 뿐 아니라 정책추진과정에서의 거래비용을 크게 높이는 부작용을 낳는다.

[그림1] 정부는 소수의 거대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주1. 이 나라가 일부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가? 전체국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전자의 답변 비율.

◎ 반응성(responsiveness)의 위기 : 민의 대변의 기대와 현실사이의 괴리

둘째, 민주주의가 활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들을 단순히 통치의 대상이 아닌 정책진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가 제 때 반영되어야 한다. 즉 국정운영이 민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소통될 할 때 국민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국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반대로 민의에 둔감하고 심지어 무시한다고 느낄 경우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커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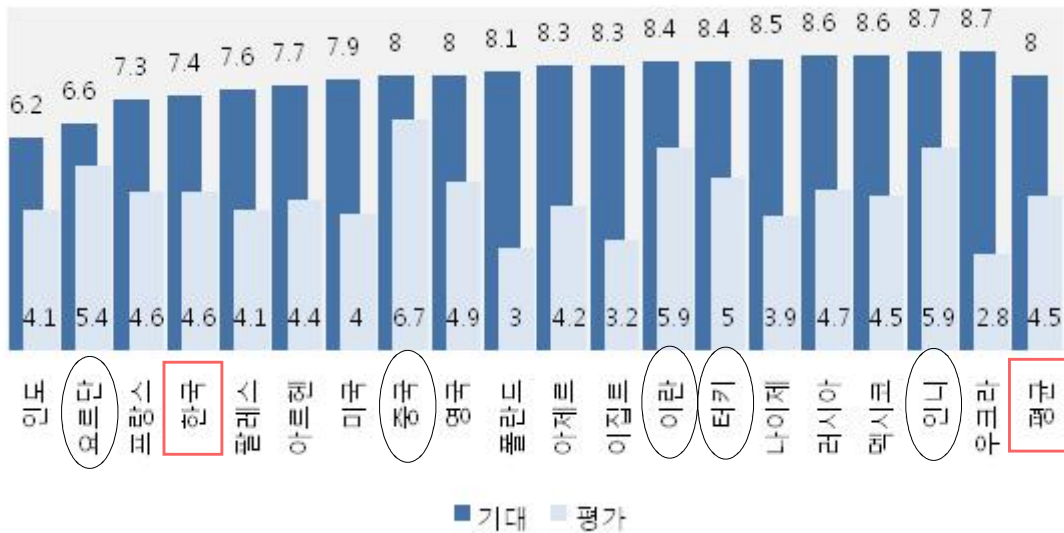
국정이 얼마나 민의에 따라 반응해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는지 또 실제 정부가 얼마나 제대



로 반응하고 있는지 물어 본 결과 국가의 통치행위가 보다 민의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기대는 큰 반면 실제 국정운영이 민의에 둔감하다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국정이 민의를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는가를 10점 만점으로 물어 본 결과 전 세계 응답자 평균은 8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자기나라가 얼마나 민의에 따라 통치되고 있다고 보는가에 대해서는 4.5점에 그쳤다.

정부신뢰도가 높았던 중국과 중동 회교 국가들에서 정부가 민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바라는 기대가 클 뿐 더러 실제 정부가 반응하는 정도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후했다. 중국 국민은 정부가 민의에 반응하기 바라는 기대수준에서는 8점을 주었고, 현 중국정부의 반응정도에 대한 평가에서도 가장 높은 6.7점을 주었다. 이란이나 인도네시아, 요르단, 터키 등의 회교국가들에서도 자기나라 정부의 반응도에 5점 이상의 점수를 주어 자신들의 기대와 현실평가 사이에 큰 괴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정부불신이 컸던 영국(4.9점), 프랑스(4.6점), 한국(4.6점), 미국(4점)에서는 평균에 많이 못 미침으로써 정부가 국민여론을 간과하거나 무시한다고 보는 경향이 강했다[그림2].

[그림2] 민의에 대한 정부 반응도 : 기대와 평가(10점 만점)



주1.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기대는 '이 나라가 얼마나 민의에 기초하여 통치되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아니다 0점, 전적으로 그렇다 10점, 중간을 5점으로 하여 응답자가 응답한 점수를 평균한 값. 자기나라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는 '이 나라가 얼마나 민의에 기초하여 통치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위와 같은 척도로 응답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한 값이다. 즉 10점에 가까울수록 민주적이라는 의미이며, 5점보다 작을수록 비민주적으로 통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효율성(effectiveness)의 위기 : 정부의 경제를 살리는 능력 불신

셋째, 대표적인 민주주의 이론가인 후안 린즈가 주장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가 활력있게 지속가능하려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실적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은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적 실적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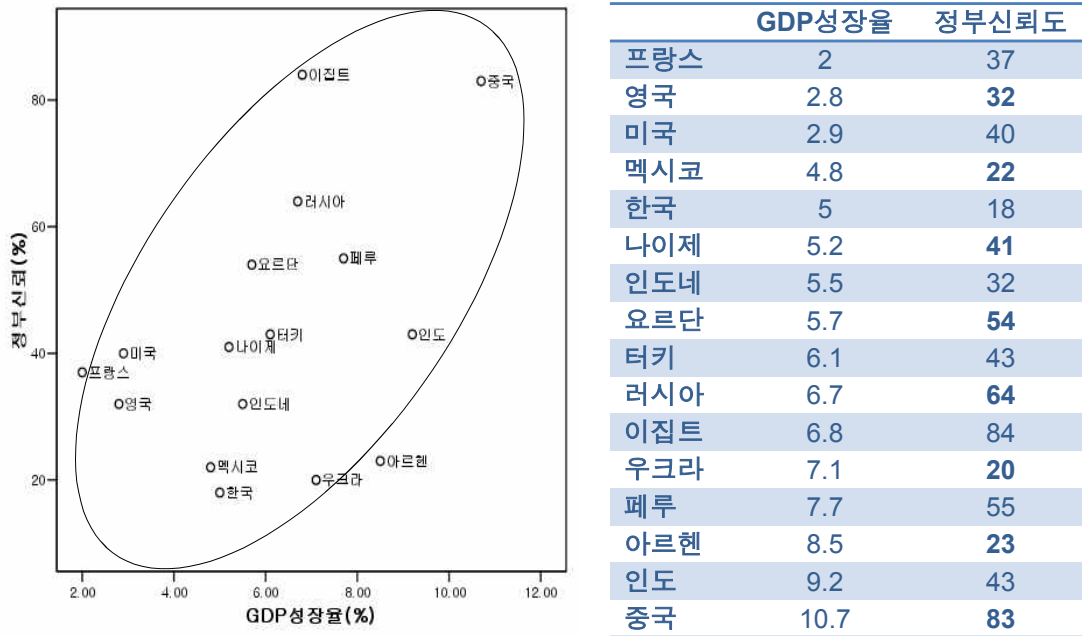




집권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초기 민주적 정권은 경제적 실적이나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보다는 과거청산이나 낡은 제도의 개혁을 통해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일정시점이 지나면 어떠한 민주정부도 경제적 실적으로 뒷받침되는 통치력을 갖추지 못하면 정통성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들의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경제적 실적과 각 국 국민의 정부신뢰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각국의 GDP성장율과 정부신뢰비율을 교차시켜 보았다. 우크라이나나 아르헨티나 높은 GDP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정부신뢰도가 낮은 경우, 한국처럼 GDP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정부신뢰도가 최악인 경우가 예외로 보이지만 대체로 중국(10.7%)이나 페루(7.7%), 러시아(6.7%), 이집트(6.8%), 요르단(5.7%)처럼 경제성장율이 높은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객관적인 경제지표 대신 주관적으로 느꼈던 경제체감도를 기준으로 보면 경제실적과 정부불신사이의 관계를 부정하는 사례는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신뢰도 변동이 정부의 경제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림3] GDP 성장률과 정부신뢰도 간 관계



주1. GDP 성장률은 현 미달러시세 기준(World Bank, WDI 2007)

### III.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 정치적 신뢰기반 복구

본 조사를 통해 한국 정부는 조사국 중 최대 정치불신국으로 꼽히고 있다. 본 연구팀이 정치적 신뢰(political trust)에 주목하는 이유는 정치 불신이 정치체제 질서 자체에 대한 부정



은 아닐지라도 민주주의의 작동과 활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규범적 차원에서 보면 민주주의는 권위주의처럼 강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운영되어야 그 활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러한 자발적 동의는 정부가 자신의 이익과 기대를 실현시킬 줄 것이라는 정치적 신뢰기반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정치적 신뢰의 붕괴는 정치적 냉소로 이어지고 이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심각한 장애요인이 된다(Erikson and Tedin 2005).

정책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정치적 신뢰의 붕괴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정치적 •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념이나 노선을 떠나 신뢰기반이 강한 정부 하에서 국민들의 자발적 동의와 지지를 확보하면서 중요한 정책결정과 개혁정책이 결실을 얻게 된다. 그렇지 못한 정부 하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요란할 뿐 일관된 정책결정이나 사업추진이 어려워진다. 특히 정치적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국민들로 하여금 투표와 같은 기본적인 정치참여 뿐 아니라 매 쟁점마다 정치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실력행사 같은 행위에 의존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Abramson and Aldrich 1982).

이렇게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인들은 눈앞의 실적과 지지율에 연연하여 정작 그 기반이 되는 신뢰기반을 해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 정치의 신뢰기반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국민들은 현재 정부를 신뢰하냐는 질문에 대해 10명 중 여덟 명은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를 불신하는 규모가 큰 것도 문제지만 그 응답 구성을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세대별로 보면 시간 경과에 따라 사회 주도집단이 될 현재의 20대와 30대에서 정부 불신이 심각하다. 50대 이상에서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8.4%였던 반면 20대에서는 8.5%, 30대에서는 겨우 4.3%에 불과하다. 40대도 14.1%에 그쳤다. 이러한 불신 세대가 사회주도 그룹이 될 경우 정치적 냉소가 지속될 경우 전 사회적으로 정치불신은 만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소득별, 학력별로 보면 계층간 정부 신뢰의 격차가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주목할 점은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최저 소득계층과 중졸이하의 저학력 층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반면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과 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 층에서는 10%대 초반의 극심한 정부 불신을 보여준다. 이는 정부에 대한 인식차이가 곧바로 계급적, 계층적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또한 여론을 주도하는 고학력, 고소득 층에서 정치적 불신이 크다는 것은 정치적 냉소가 보다 폭넓게 확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치적 불신이 팽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노무현 정부 시기에 학습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단기적인 국정 지지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주요인 중의 하나가 특별한 정책적 실패의 측면보다는 정치적 신뢰기반을 스스로 약화시켰던 후과로 볼 수 있다. 국정난맥을 단기적으로 돌파하기 위해 내놓았던 ‘연정론’이나 ‘개헌론’ 등은 노 정권의 정치적 신뢰기반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킨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시점에서는 집권초기부터 급격한 지지율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현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 정치신뢰 문제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시적으로 떨어진 지지율은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신뢰기반 자체가 한번 무너지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현 정부와 여당이 각종 악재와 내홍을 겪고 있지만 야당이 크게 반사이익을 보지 못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구범여권의 신뢰기반이 무너진 데서도 오는 장기적인 후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현 정부가 신뢰기반의 구축방안을 마련하는데 몇 가지 중요한 시점을 던져 주고 있다. 정부 불신의 주요인이 정부가 특정세력만을 대변한다는 불신과 민의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독선, 그리고 경제적 실적에 대한 불만으로 부터 비롯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이 맞다면 새 정부의 ‘기업프렌드리’의 강조가 다른 계층에 대한 배제로 이해될 수 있으며, 국민 다수가 부정적인 대운하사업의 무리한 강행은 민의에 대한 무시로 비쳐질 수 있다.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수출과 같은 거시경제 차원은 물론 물가비상으로 체감 경제가 급속히 나빠지고 있는 것도 실적을 통한 신뢰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방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들은 국민다수의 상당정도의 신임 없이는 추진하기 힘든 과제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장의 실적보다 정치적 불신을 유발할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림1] 계층별 정부 신뢰 비율(%)

